

2024.3.4.(월) 11시부터 보도 및 공개 가능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

2024. 2. 2.



해양수산부

순서

I. 추진성과와 평가	1
-------------------	---

II.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
-------------------------------	---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4
--------------------------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민생지원 강화**)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
 - 전체어가의 35%인 영세어가(1.6만호)와 어선원(7천명)에 신규 직불금 지원
 - 교통 소외도서 10개 여객 운항 지원, 섬 주민 택배비 신규 지원
 -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승선기간 단축, 비과세 한도 확대*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급여 : (현행)월 300만원 → (확대)월 500만원
 - (**해역·수산물 안전**) 日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바다·수산물 안전 확인
 - 철저한 안전관리로 오염수 방류 후 부적합 해역·수산물 미검출
 - 선제적 소비활성화 지원으로 오염수 방류 후에도 수산물 소비 안정

* 과거 일본의 오염수 유출 인정('13.7) 이후 수산물 소비 최대 22% 감소 사례와 대비

 - 일일브리핑(부처 합동), 네이버·카카오 등 연계 적극적 대국민 소통
- (**역동경제 기반**) 역동적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
 - 어업 규제혁신 등 선진화 대책 마련('23.9)으로 수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해양모빌리티 대책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도, 역대 최초로 '김' 수출 1조원 돌파(7.9억불)

2 개선 필요사항

- (**어촌·수산업 활력**) 어촌 인프라 개선 등에도 불구, 어촌소멸 지속
 - * 어촌지역 491개 중 58% "소멸위험지역", '45년 약 87% "소멸고위험지역" 전망
 - 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자원 고갈 등으로 생산기반 악화

⇒ 어촌·수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및 지원대책 마련 필요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수산업**) 공급 불확실성 확대, 수산물 수요 위축 등 지속가능성 위협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영향 수산물 생산 감소, 높은 수산물 물가 지속
 - 국내적으로 수산업 경영비용 증가, 수산식품 소비 감소
 - * 식료품 지출 중 수산식품 비중(통계청, %) : ⁽¹⁰⁾12.5% → ⁽²⁰⁾10.8% → ⁽²¹⁾10.6% → ⁽²²⁾10.2%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소비자 불안도 일부 상존
- ⇒ 물가·안전관리 강화 및 생산기반 제고를 위한 수산업 혁신 필요
- (**수출입물류**) 교역은 개선, 물류 불확실성과 항만 간 경쟁은 심화
- 세계 교역은 소폭 개선 전망, 신흥시장 교역 비중 지속 확대
 - * '24년 교역 3.5% 성장(IMF) / '23년 수출 확대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신흥시장(대한상의)
 - 홍해사태, 파나마운하 통행량 제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 지속
 -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항만 간 경쟁 심화, 부산항 생산성은 여전히 열위
 - * '22년 기준, 부산항 선석 생산성은 세계 26위로 중국 등 경쟁국 대비 낮은 상황(KMI)
- ⇒ 해상수송망 다각화, 스마트메가포트 조성 등 물류경쟁력 혁신 필요
- (**연안·어촌**)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
- 전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신산업 확대* 등 산업 성장 가능성 충분
 - *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시장의 50%(UNWTO) / 세계 해양신산업 규모 '30년까지 2배 성장 전망(GIA)
 - 국내 연안·어촌은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삶의 질 만족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인한 재해·재난 위험 증가 등 정주 여건 취약
 - * 삶의 질 만족도 : 도시(6.4) > 농촌(5.2) > 어촌(4.9) > 섬지역(3.8)
- ⇒ 레저·신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정책
비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방향

민생 안정 / 역동 경제 / 균형 발전

정
책
과
제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

- ① [안심 식탁] 수산물 물가 안정, 방사능 관리 강화
- ② [어업인·어촌] 어업인 경영 안정, 어촌 정주여건 개선
- ③ [환경·안전] 깨끗하고, 사고·재해 없는 바다 구현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

- ④ [물류 혁신]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 해양모빌리티 선도국 도약
- ⑤ [수산 혁신]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 → 미래세대에 기회 제공
수산식품 수출⁺ 전환, 유통구조 개편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

- ⑥ [지방시대] 권역별 레저거점,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활력 제고
- ⑦ [글 로 벌] 국제사회 기여 확대, 해양영토·어업 주권 확립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① [민생+] 국민 안심·안전 식탁 조성

□ 『수산물 물가』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제·종합적 조치로 물가 안정, 소비 확대 지원
 - 국민 선호 품목(오징어·고등어 등) 정부 확보 물량 확대 및 적기 공급
 - * 정부 비축 규모 : ⁽²³⁾3.2만톤(예산 1,750억원) → ⁽²⁴⁾4.4만톤(예산 2,065억원)
 - 공급 부족 품목은 관세 인하·면제 등을 통해 신속 공급 지원
 - 수산물 50% 할인행사 매월 시행,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확대

수혜자 혜택 수산물 50% 할인행사, '24년부터 '대형마트' 외에 '동네마트'에서도 실시

- 품목별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 및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고도화
 - * ('24) 고등어·갈치·오징어 / ** 품목별 수급 전망 기반,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

□ 『해역·수산물 방사능 안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 국내 쏠 해역과 우리 해역 밖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 국내 해역은 모니터링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확대
 - 공해상은 오염수 유입 경로인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을 조사
 - *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 태도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 수산물은 생산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검사 실시, 검사 건수 1.5배* 확대
 - *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 : ^(23년)12,012건 → ^(24년)18,000건 이상

달라지는 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24년부터는 '개인' 외에 '업·단체'도 신청 가능
*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 신청 → 정부가 검사 후 결과 공표

- 수입 수산물은 취급 업체에 대해 상시·특별(연 7회) 원산지 단속

② [생활+] 어업인, 어촌·섬 주민의 생활 안정

□ 『어업인 경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어업인 경영 여건 개선
 -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확대 및 어업인·법인별 용자 한도 상향
 - * (정책자금 규모) (기존)3.4조원 → (‘24년)4.1조원 / (용자한도) 일괄 5억원씩 상향
- 수혜자 혜택** 어업인 용자한도 10 → 15억원, 어업법인 용자한도 15 → 20억원
- 양식어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3→5천만원)하여 실질소득 제고
 - 전기료·유류세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비용 절감
 - 양식어업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보조 지원(가구당 최대 44만원)
 -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 시,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4, 45억원)
 - 전체 어가의 30% 이상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인상*
 -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 (기존)연 120만원 → (‘24년)130만원
 -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 마련(‘24.2분기)

□ 『어촌·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 어촌 소멸 획기적 개선을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24.上)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 추진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근거 마련(‘24)
- 민간투자 연계,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 신규 조성(65개 설계, 35개 선정)
 - 어촌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 * 지자체가 어촌 인프라 개선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고려, 차등 지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도서의 교통권 및 생활물류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어복(어촌복지)버스, 마을단위 비대면 섬 닥터 시범사업 추진
 - 교통소외도서 여객 지원 확대(10→20개), 섬 택배비 연중 지원

3 [환경⁺ · 안전⁺] 깨끗하고, 재해 · 사고 없는 바다

□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마이너스 전환을 위해 발생원 저감, 수거량 대폭 확대
 - 그물 등 어업 도구의 해양투기 차단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시행
 - * 어업인이 어업도구 구입 시 보증금 납부 → 사용후 반납시 보증금 환급
 -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연 14.5만톤, 추정)보다 많은 양을 수거(15.5만톤 목표)
 - * 무인도서, 테트라포트 등 사각지대 방치쓰레기 수거 강화
-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1천km² 이상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 해양기후변화 전담조직 운영('24.1~), 해양·극지 기후대응전략 수립('24.下)

□ 『재해·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구현하겠습니다.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을 위해 현장 지원 및 안전시스템 강화
 - * 사망·실종자 50% 저감 : '17~'21년 평균 118명 → '27년 59명
 - 구명조끼 무상보급 확대(1·2인 선박), 해운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 * 여객선·위험물 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비용 공시를 통해 자발적 투자환경 조성
- 사고·재해 빈도가 높은 해안가·항만 등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 연안재해 근본적 저감을 위해 국민안심해안* 20개소 신규 지정 추진
 - *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해안가 지역을 국가가 매입 → 완충공간으로 조성
 -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만 재해 예방 인프라 보강*
 - *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방호벽 설치 등 침수 취약지구 정비(39개항 65개소, '24~)
 -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잦은 구역에 안전 표지판·표지선 의무 설치
- 세월호사고 10년,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선 안전 대폭 강화
 - 고위험 여객선 집중점검, 전기차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 지침 보완

4 [수출물류*] 세계 최고 물류서비스로 수출경제 견인

□ 『스마트 메가포트』로 항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완성되는 부산항신항, 시작되는 진해신항 중심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 수립, '24.上)

* 최대 3만TEU급 초대형선박(現 세계최대 규모 2.4만TEU급)이 상시 입출항 가능한 스마트항만

- 우선, 부산항신항(2-5단계)에는 국내 최초로 항만 내 모든 작업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 개장('24.3월)

수혜자 혜택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 실현, 기존 항만 대비 물류생산성 20% 향상 기대

- 진해신항은 방파제 등 외곽시설 착공('24.下 → '29년 개장 목표)
-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우리 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개발
 - * 기반시설 구축('24~) 및 장비 도입(~'26) → 1단계 개장('27)
- 권역별 배후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특화항만 차질없이 개발
 - * (부산·경남) 동북아물류 허브 / (서해) 對中 교역 / (동해) 에너지오일 / (제주권) 해양관광
- 부산항 모든 터미널에 전자식 화물 인수도중 전면 도입('24.1~), 인천신항 무인전산화 CFS* 구축 등 항만 내 디지털 전환 지원
 - *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와 화주 간 화물을 분배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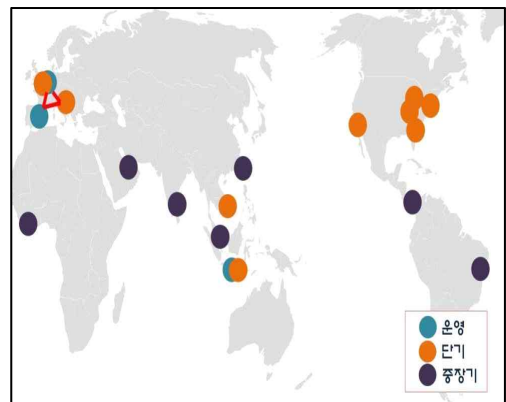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 미주 지역, 민(CJ 등)·관 협작을 통해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

* LA('24.下 운영), 뉴욕·시카고 착공('24.上)

- 유럽 지역, 기존 남·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

* (남)바르셀로나, (서)로테르담, (동) 크로아티아 등



- 신흥시장, 베트남 물류센터 개시('24.下) <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계획>

□ 『세계 4번째, 해상수송력 1억톤』,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적선사 해상수송력 지속 확충, 주력 및 신흥시장 수송망 다각화
 -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1.3만 TEU, HMM) 신규 투입('24.2월~)
 - * 기존 보유 수송력 9,927만톤에 더해 '24년 1억톤 달성 전망
(국가별 순위(DWT) : ①그리스(4.2억톤) ②중국(3.7억톤) ③일본(2.5억톤) ④한국(1억톤 ↑))
 - 핵심 항로 대형선 투입,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항로 신설 지원
-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기간 연장(~'24.6월), 민관합동 비상대응반 운영
-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 2배 확대(2,500→5,000억원)

□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 친환경선박 전환율 20%(現 14%)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패키지 지원*
 - * 취득세 감면(신규), 보조금(선가의 최대 30%), 대출금리 우대, 설비 설치비 지원 등
 - 글로벌 친환경선박 선도국 도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확대
 - * 한-미 녹색해운항로('28년 시범운항)에 이어, 덴마크·호주·싱가폴 항로 신규 구축 추진
 -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 추진
 - * 초대형 '컨'선 그린메탄올 실증('24.1월, 울산항), LNG 벙커링 실증('24.上, 부산항)
- 디지털선박 시대 본격 개막, 공공 개발 자율운항선박 최초 운항 개시*
 - * 민간 1,800 TEU 신조 컨테이너선을 통해 한-중-일 국제항로 운항('24.下)
- 해양교통 안전·편의 제고를 위해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 초고속 통신망 등을 통해 오차범위 5cm 이내 선박위치정보 제공('24)
 - 바다내비 오픈플랫폼 전환, 음성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24~)
 - 선박 밀집해역 정보 디지털화 및 대국민 제공 추진('24~)

5 [수산업+] 혁신·개방으로 수산업의 미래수출산업화

□ 생산-① : 규제혁신·디지털화로 『어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 등 과도·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철폐

수혜자 혜택

'24년, 어선 검사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등
어업규제 120건 이상 개선 → 연간 800억원 이상 비용 저감 효과

-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TAC로 관리 → '27년 이후 100% 관리
 - 어선 위치·어획량 감시체계 구축, 어획증명제 도입 등 모니터링 강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24.上 목표)
 - 어선 간 할당량 거래제(ITQ) 시행을 위한 도입방안 마련('24.上)
- 어선 매입,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시범사업 추진
→ 어선은행을 통해 청년 등 신규 진입자 대상 어선 중개 지원
- 모바일허가증 도입, 어장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 디지털 어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24.下) → 시기·어장별 어장정보 구축제공

□ 생산-② : 스마트화·개방으로 『양식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권역별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준공*으로 60조원 연어 시장 진출
 - * 부산('24.2, 연어), 강릉·양양('24.12, 연어) → 이후 타 품목(새우 등) 클러스터 준공
 - 클러스터 기반, 양식 데이터 축적·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구축(~'25)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25) 대비, 관련 법령·기준 등 정비
 - * 관행적 재면허→어장청소 등 종합평가 후 재면허 / 평가항목 구체화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 등('24)
- 양식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 인력에게 양식장 임대('24년, 10개)

수혜자 혜택

양식장 확보, 임대료 50%(개소당 연 2,750만원) 지원을 통해 초기 부담 완화

- 내수면양식 육성을 위해 내륙권 유통센터 및 아쿠아포닉스 준공('24.6, 용인)

□ K-블루푸드 『1억불 수출품목을 6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전환^{*}을 위해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 수산식품 수출은 '20년부터 지속 성장하였으나, '23년은 전년대비 4.6% 감소

- 수출 1위, '김'은 수출 영토 확장(130개국), '24년 수출 8억불 달성
- 수출 2위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으로 '24년 수출 6억불 달성
- 굴·전복·넙치·어묵 등 유망품목은 품종 개량 등 기술 혁신,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여 '수출 1억불 스타품목'으로 육성

*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40개사), EU 해조류 시장 개척, 아세안 활수산물 수출

- 수산식품 수출 '새싹 - 초보 - 강소' 등 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

* (새싹기업) 단순 가공에서 고부가 간편식, 즉석식품 제조업체로 전환 지원(12억원), (수출바우처) 포장디자인, 수출 검사비, 국제인증, 마켓테스트 등 지원(77억원)

- 블루푸드테크펀드(200억원), 세컨더리 펀드(150억원) 조성 등 민간투자 확대

□ 수산물 『유통구조 개편』으로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新 유통 트렌드를 감안, 도매시장 재생을 위한 기능 재정립 등 수산물 유통 제도·법령 재정비(「수산물유통법 개정」, '24)

- 민간 참여 이력제 본격 실시, 수산물 총 생산량의 15%까지 이력 관리

- 마트 등 민간 자체관리 제품도 정부 기준 충족시, 공식 이력제품으로 인정

- 대도시 인근, 도매시장 등 도심형 유통가공센터^{FPC} 설립 추진(3개소 공모)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24), 저온·친환경 위판장 5개소 조성

- 수산가공업 스마트(IoT·자동화 등) 전환 테스트베드 조성(2개소)

* 전북 군산 '24년 착공 → '25년 완공 / 경북 영덕 '24년 실시설계 → '26년 완공

6 [균형발전+] 해양 레저 ·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해양레저 기능 통합, 대형화』로 모두가 즐기는 관광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 10여개로 분산된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24)
- 개별 인프라 위주 해양레저 사업을 권역별 대형 프로젝트로 전환
 -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착수('24년 마스터플랜)
 - 부산·경남·전남 관광자원을 연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 * (부산) 도심형 문화·엔터테인먼트, (경남) 글로벌 마리나허브, (전남) 해양 치유 허브
 -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연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
 - * (충청권) 가로림만 공원('24년 타재), (경상권) 포항 호미반도 일원, (전남권) 여지만·순천보성 등

□ 『해양신산업 성과 창출』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합니다.

- 해양바이오는 상용화 유망분야 집중 지원, 권역별 거점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시장규모 2배 확대('21년 6천억원 → '27년 1조 2천억원)
 - * (중부) 서천('24년 준공), (서남부) 완도('24년 착공), (동부권) 포항('24년 설계)
-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해외 수주를 지원하여 수주액 6천억 달성('24)
 - * 해양플랜트서비스 수주 실적(억원) : ('22)907 → ('23)1,839 → ('27)8,000(목표)

□ 전국에 『해양교육·문화 거점 구축』, 미래 바다시민을 키워 가겠습니다.

- 처음으로 공식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 신설('24), 교육현장 보급*
 - * '24년 완도수산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고교 → 전국 단위로 순차 확산
 - 교육현장에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해양교과목 활성화방안 수립('24.上)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24.下)으로 전국 2시간권 해양문화시설 구축
 - * (既 운영) 부산, 울진 / (건립 예정) 인천('24.下), 청주('25), 완도(예타 추진)

7 [글로벌+] 국제사회 기여 확대, 해양영토 주권 확립

□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글로벌 가치 실현, 수혜국 역량 강화를 위해 ODA 지원 1.5배 확대
 - * 해양수산 ODA 지원 규모 : ('23) 287억원, 30개 사업 → ('24) 436억원, 39개 사업
 - 해양데이터 센터 구축, 해기사 역량강화, 양식연구소 설립,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해양플라스틱 저감 등 사업 다각화
- 우크라이나 주요 항만 재건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24.12)
 - * 마스터플랜 수립 → 항만별 타당성 조사 → 유무상원조(ODA·EDCF) 연계 지원
- 국제 고위급 협의체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아젠다 주도
 - * Our Ocean Conference : 미 국무부 주도('14~), '25.3, 한국 개최 확정
 - UN Ocean Conference : UN 주도('17~), '28년 한국 유치 추진

□ 『우리 해양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확대
 - * 현재 영해기점무인도서 13개만 관리 중 → 최외곽 유·무인도 부속도서까지 포함
- 기관별로 상이한 도서 산정기준 합리화, 국가 공식 도서통계 생산
- 서해 경계미확정 수역 위성 모니터링(4회), 환경조사(2회) 등 대응 강화
- 남해(이어도)·서해(소청·가거초)에 이어 동해 과학기지(왕돌초) 구축('24년 착공)

□ 『국가 어업주권』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어업관리 조직 강화, 무인항공기 3기 도입('24.下) 등 인프라 확대
-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어선 AIS 설치·작동 의무화('24~)
 - *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중 양국 간 합의 완료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민생 안정 | 역동 경제 | 균형 발전

01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

안심식탁



- 수산물 물가 안정
- 방사능 관리 강화

어업인·어촌



- 어업인 경영 안정
- 어촌·연안 활력 제고

환경·안전



-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 사고·재해 없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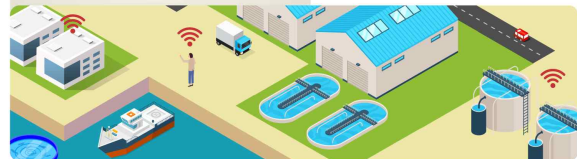
02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

물류혁신



-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
-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 해양모빌리티 선도국 도약

수산업혁신



- 수산업 생산구조 혁신 → 미래세대 기회
- 수산식품 수출 플러스 전환

03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

지방시대



- 권역별 레저거점, 신산업 육성
- 전국 해양 교육·문화 거점

글로벌



- 국제사회 기여 확대
- 해양영토·어업 주권 확립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1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

국민 안심·안전 식탁을 만들겠습니다



- 선제적·종합적 물가안정 조치
- 정부비축 및 공급확대
- 수산물 할인행사 매월 실시
- 최대 50% 할인
(설 명절 등 최대 60%)

수산물 물가 관리



- 해역 모니터링 확대
- 국내 200 → 243개
- 공해상 8 → 18개
- 국내 수산물 검사 확대
1.2만 → 1.8만건

해역·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어업인·어촌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 수산정책자금 3.4 → 4.1조원
- 양식비교세 한도 3 → 5천만원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인상 120 → 130만원
- 전기요금 가구당 44만원 지원

어업인 경영 지원 대폭 강화



- 어촌·연안활력대책 수립
- 100개 어촌 인프라 개선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어복버스, 섬 닻터
- 소외도서 20개 여객지원

어촌·섬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깨끗하고, 재해·사고 없는 바다를 구현하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마이너스 전환
- 발생(14.5만톤) < 수거(15.5만톤)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해양기후변화 전담조직
- 해양보호구역 추가지정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 전수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 연안지역 완충공간 조성, 국민안심해안 20개소

재해·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2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

세계 최고 물류서비스로 수출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중심 스마트메가포트 구축

· 물류 생산성 20% ↑
완전자동화항만 최초개장

스마트 메가포트



· 세계 4번째 해상수송력 1억톤

·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 신규투입

· 예멘 반군 사태 등
물류난 선제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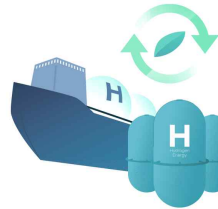
사각지대 없는 수송망 구축



· '미주' 항만-내륙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

· 신흥시장 '베트남' 물류센터 개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 친환경선박 전환율 20% 조기달성 지원 확대

· 선박 위치정보 오차 대폭 축소 10M → 5cm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

혁신·개방으로 수산업의 미래수출 산업화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어업규제 120건 철폐

· 전체 어획량 50% TAC 관리

· '어선은행' 시범사업
청년 신규진입 지원

규제혁신·디지털화로 어업 혁신



· 김 8억불, 참치 6억불 달성

· 굴,전복,어묵 등
수출 1억불 스타품목 육성

1억불 수출품목 6종으로 확대



·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 60조원 연어시장 진출

· 양식장 10개소 임대,
진입장벽 완화

스마트화·개방으로 양식업 혁신



· 수산물 생산량 15%까지
민간주도의 이력 관리 확대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착공,
저온·친환경위판장 조성

· 도심형 FPC 조성(3개소)

수산물 유통구조 개편

2024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3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

해양 레저·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남해안해양레저 관광벨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

해양레저 기능 통합·대형화



- 해양바이오 상용화 집중지원
- 해양플랜트 해외수주액 6천억 달성

해양신산업 성과 창출



- 최초 '해양과목' 공식 교육과정 도입
- 전국 2시간권 해양문화시설 구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교육·문화 거점 구축

국제사회 기여 확대·해양영토 주권 확립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ODA 1.5배 확대 (436억원)
- 우크라이나 항만재건 지원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전체 영해기점 23개 관리 강화
- 3면 해양과학기지 구축 - 동해과학기지 착공

우리 해양영토 주권 확립



- 조직강화, 무인항공기 3기 확보
- 모든 중국어선 AIS 설치 의무화

국가 어업주권 대폭 강화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민생 안정

매월 **50%**

수산물 할인 행사

1.8만건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5억원씩

어업인·법인 융자한도 상향

5천만원

양식어가 소득·비과세 한도

44만원

전기료 인상분 보조 지원

100개

어촌 경제·생활인프라 개선

20개소

교통 소외도서 여객 지원

연중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

국내 최초스마트항만 개장
(부산항신항 2-5단계)세계 **4**번째

해상수송력 1억톤 달성

목표 **20%**

국내선박 친환경선박 전환율

5cm

선박위치정보 오차범위 축소

50%TAC 관리 비율
(전체 어획량 대비)**60**조 규모스마트양식클러스터
연어 시장 진출수산물 **6**종

수출 1억불 달성 목표 품목

목표 **15%**

수산물 이력제 관리 물량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

남해안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부산-경남-전남)목표 **6**천억

해양플랜트서비스 해외 수주

최초 신설

교육 현장에 해양교과목 신설

전국 **2**시간권

해양문화시설 구축

1.5배

해양수산 ODA 규모 확대

100%

전체 영해기점 특별관리

3면해양과학기지 구축
(남해·서해에 이어 동해까지)**ALL**모든 중국 어선
AIS 설치 의무화